



민주당 압승!

그러나 곧 배신할

것이다

관련 기사 2~4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6면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5면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자였다

7면

13퍼센트 인상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8면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일자리 보호에
우선 투자하라

10면

사회적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11면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12면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김문성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분의 3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우파 미래통합당은 비례 위성 정당까지 더해도 103석밖에 얻지 못했다. 역대급 참패다.

1988년 13대 총선 이래로 한 정당이 이 정도로 의석을 독식한 적이 없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20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 된 민주자유당(통합당의 전신)도 1992년 총선에서 1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는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열풍 속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단독 과반 정당이 된 적이 있었다. 1988년 이래 최초 과반 정당이었다. 그러나 그 당을 지지한 대중의 개혁 열망을 배신한 결과,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미래통합당의 옛 이름)이 역대급 차이로 승리했다. 2008년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은 정치적 환멸감이 여전히 컸던 덕분에 역대 최저 투표율(46.1퍼센트) 속에서 153석을 얻었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위해 노동운동이 투쟁을 자제한 덕분에 2012년 총선에서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은 152석을 얻었다.

2004년 총선부터는 2016년만 빼고 나머지 총선에서 모두 승자가 과반 정당이 된 것이다. 이런 경향은 주류 양당 구도가 점차 강화돼 온 것과 연관된 현상인 듯하다.

이번 총선은 1992년 14대 총선(71.9퍼센트) 이후 최고 투표율(66.2퍼센트)을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은 자본가 계급 양당 모두 지지층을 결집해 양극화를 극대화한 결과였지만, 그중 우세한 것은 우파 야당에 대한 반대였다. 사전투표율(26.9퍼센트)이 역대 최고였는데, 수도권 박빙 선거구에서 막판 당락을 가른 것은 사전투표합들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수도권에 출마한 통합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다.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심재철,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서울시장 오세훈 등.

이번 선거는 주류 양당 간 진영논리의 심화를 보여줬다. 지난 총선에서 약진한 국민의당 등 두 당 사이에 존재했던 야당들이 모두 사라졌다. 양당 외 정당 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유일하다.

주류 양당 간 진영논리의 압착 속에서 정의당이 진보 염원 대중 다수에게 선택지를 제공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같은 6석을 얻었다. 하지만 정당비례 득표는 4년 전보다 100만 표가 늘어난 약 270만 표를 얻었다. 노동계 진보정당 득표 총합이 300만 표를 넘긴 것도 처음이다. 극심한 양당 대결 구도 속에서 진보 정당 득표가 늘어난 것은 (유권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도) 지배계급 정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에 대한 대중의 염원이 실재함을 보여 준다.

물론 정의당의 성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자세한 분석은 이번호에 실린 다른 기사,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를 보라.) 득표가 크게 증가했는데도 의석이 늘지 않은 것은 주류 제도의 허점과 그를 이용해 비열하게 정의당의 뒤투수를 친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렇다 해도 진보 정당들의 정치적 존재감이 약화된 것은 이것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Double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진보 표와 의석을 빼앗아 가려고 줄기차게 책략을 부렸다

선진국 방역 실패의 반사효과

이번 총선의 선택을 가른 단연 최대 쟁점은 세계적 대유행이 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경제 상황이 결합되는 이중 위기였다. 이것이 다른 모든 쟁점들을 압도했다.

3월 중순 이후 선진국들에서 한국보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걸로 비쳤다. 특히, 선진국 정부들과 언론이 한국 정부를 우수하게 평가한 것이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추격 열망, 컴플렉스가 지배적인 한국인 대중에게 큰 반향을 얻은 듯하다. “한국의 대외 인정에 대한 갈구는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다.”(《경향신문》 4월 1일 [정동칼럼] 한국 사회의 대외 인정결핍증)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예정대로 치러 국제적으로 국가적 위신을 높이려고 한 듯하다. 지배계급 내에서도 총선 반대는 없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비교적 빠르게 재난 소득 지원을 본격화했다.(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당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몰려 있던 대구·경북 지역에서 통합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전혀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 주지 못한 것과 대비됐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추경예산과 소득 지원은 사실 미흡하고 실행도 더뎠는데, 우파 야당은 그런 정부안조차 '예산 낭비'라고 반대했다. 통합당은 신자유주의적 균형재정론, 보편적 소득 지원 반대, 기업과 부자 감세 우선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국의 개혁 배신에 실망했던 젊은 층은 여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라기보다 반(反)서민적 행보를 취하며 쥐꼬리만 한 지원조차 반대하는 우파 통합당에 대한 반감으로 민주당에 투표

한 것으로 보인다(“미워도 다시 한 번”).

노동자·서민 대중은 우파 정부들이 경남 진주의료원 폐쇄 등 의료 영리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해 온 것을 기억한다. 여기에 선거 직전 박근혜가 우파 단결을 촉구한답시고 미래통합당 지지를 공개 선언한 것도 젊은 층의 반(反)박근혜·반(反)우파 정서를 자극했을 것이다.

그 방증으로는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낙선 대상자들의 대거 낙선을 들 수 있다. 낙선 대상 17명 중 12명이 낙선했다. 차명진, 김진태 같은 전문 ‘막말러’들 뿐 아니라 황교안, 심재철, 민경욱, 안상수 등 통합당 지도부 출신 인사들도 대거 낙선했다(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첫 총선이었다).

그런데 정의당과 민주노총 등 진보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국가적 위기이므로 국민적 단합에 함께하겠다고 해, 차별화된 진보 대안을 제시해서 대중을 설득하고 결집시킬 시간을 스스로 줄여 버렸다. 우파의 신자유주의적 해법에 대한 반감을 진보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스스로 집회와 행진을 자제해, 대중이 감염병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수동화되는 경향에 일조했다.

불리한 객관적 조건들이 형성되는 데 온건진보 지도자들이 스스로 일조한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활력이 없다면 진보·좌파의 주체로서의 역량은 제약되게 마련이다.

착시 효과

4월 들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무당파층이 빠르게 줄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여권 지지로 흘러간 듯하다. 3월 말부터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정례 조사에서 1년여 만에 문

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을 넘기 시작했다. 2월 여론조사들과 3월 말~4월 초 여론조사들을 비교하면, 핵심 총선 쟁점으로 코로나19를 꼽는 비율이 높아지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급속히 늘어났다.

당 대표인 황교안이 통합당 당론과도 배치되는 모든 국민 1인당 50만 원 긴급 소득 지원 지급 방안을 갑자기 들고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그 정도의 제안으로 뒤엎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중의 반감은 깊었다.

결국 선진국 감염 확산이 부른 착시 효과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다르게 대응한 경험,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진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허비한 일 등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2월에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와 개혁 배신으로 선거 패배를 걱정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를 곤란케 한 개혁 배신에는 공공의료 확대 공약을 어긴 것과 의료 영리화 추진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중순부터 서울 구로구 에이스보형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3월 초순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았었다.

문재인 정부의 선거 승리가 1년여에 걸친 위기 요인들이 단기간에 우연히 덮인 덕분이라면, 단기 효과가 사라지면 언제든 위기 요인들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 기간에 부유층의 환심을 사려고 종부세 완화 등을 내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생계 직접 지원보다 기업주 지원에 강조점을 분명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중도 포퓰리즘이 좌우 양극화를 일시 전제하다

주류 양당 구도가 강화된 것은 (진보 염원이 민주당 쪽을 향하는 바람에) 좌우 양극화의 뒤뜰린 반영이다. 진보정치의 존재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자극한 진보(개혁) 염원(우파의 강경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으로 표현된)을 문재인과 민주당이 포퓰리즘으로 낚아챈 것이다. 민주당이 진보정당들, 특히 정의당을 약화시키려는 갖가지 책략을 부린 것

은 이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의당의 득표가 는 만큼 정치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다. 4년 전과 달리 심상정 대표가 지역구에서 어렵게 이긴 것이나,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성산 등지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당선하지 못한 것 등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정당들 스스로 자초한 점도 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진보정치의 대

표 조직들이 모두 반(反)우파 기치 아래 민주당과 연합·제휴하는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해 온 것,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와 제휴를 통해 성장하려 했던 점 등이 진보정치가 대중을 급진화시키고 전투적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방해로 작용했다. 지난해 정의당이 조국을 편들면서 서민층에게 실망을 자아낸 것 따위도 그런 사례다.

개혁 염원 대중에게 표를 얻고 기업주에게 헌신하는

우파 재결집 전에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환멸이 조만간 되살아날 가능성이 더 크다. 문재인은 총선 직후에는 총선 승리의 여세를 이어갈 포퓰리즘적 제스처를 취할 공산이 있다. 그러나 문재인을 1년에 걸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요인들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 자본주의의 경제·안보 위기는 더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조만간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노동개혁 등) 고통 전가 정책들, 대중이 반감을 표한 바로 그 긴축과 의료 영리화 등 시장경제 정책들을 재개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부담을 덜고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방역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로 갈 듯하다. (청와대의 권력형 부패 의혹을 윤석열 검찰이 수사해 왔는데, 집권 여당은 이번 총선이 그 의혹에 면죄부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방해하며 현 검찰의 수뇌부를 공격할 것이다. 검찰도 수사로 저항할 것이다.)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2004년 우파의 노무현 탄핵에 대한 대중의 반대로 노무현이 탄핵에서 구출되고 한 달 뒤 17대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얻었지만, 민주당과 노무현 정부는 그 기회를 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피했다.

총선이 끝나고 석달 남짓 뒤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바로 2004년 총선 승리 이후 추진됐다. 17대 국회 첫해에 비

정규직 악법과 노조법 개악이 추진됐다. 그해 가을엔 노무현이 국가보안법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지금 역사의 박물관에 가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노무현의 말이다. 한국을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려 한 한미FTA 추진도 17대 총선 이후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직후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과 합작으로 노동개혁을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재개되면, 코로나19 이슈가 압도하고 우파에 대한 반감이 되살아나면서 잠시 가라앉았던 노동자·서민층의 배신감과 환멸이 다시 자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시 바뀔 것이다.

경제 위기 문제가 더 본격적인 화두가 될수록 민주총 등 대표적인 노동운동 조직들(지도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투쟁적 대안과 좌파적 지침을 내놓지 않을 공산이 커진다.(코로나19 재유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공황 같은 국가적 위기는 개혁주의의 운신의 폭을 좁히고 기존 국가와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진보정치 활동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진보 염원을 표출한 300만 명에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긴급히 필요한 요구와 위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파, 회복 추세를 보였지만 반우파의 더 큰 벽도 확인되다

통합당의 위성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득표는 944만여 표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930만 표)보다 많다. 미래한국당의 득표는 4년 전 패배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796만 표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이 분산된 열린민주당의 151만 표도 봐야 한다. 주류 양당 사이 중간층이 주로 투표했을 국민의당 189만 표를 통째로 우파 표로 단순 합산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이번 총선은 이전 총선보다 투표자가 500만 명이나 늘었다. 가령 통합당(미래한국당)은 4년 전 총선과 비교해 경기도에서 34만 표를, 경북에서 11만 5000여 표를 늘렸지만, 두 곳

에서 득표율은 4년 전보다 더 하락했다. 부산과 대구에서도 득표가 늘었지만 득표율 증가는 1~2퍼센트로 소폭에 그쳤다.

영남에서 지역구도가 복원됐다고 보는 것은 반쪽짜리 관찰이다. 그보다는 우파와 부자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에서 그들이 주도한 결집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하다. 서울에서 통합당의 정당비례 득표율과 득표수가 둘 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곳은 강남(9퍼센트)·서초(9퍼센트)·송파(5퍼센트) 이른바 강남 3구였다. 이 밖에도 최근 부자 동네들이 늘어난 용산, 동작, 중구에서 득표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단지 승

자독식 소선거구제의 피해자이고 실제 득표에서 과거 막강하던 시절의 우파 결집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개혁 배신으로 지지를 잃어가는 것에서 반사이익을 얻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적 이득도 취할 잠재적 가능성은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통합당은 차기 대선 주자와 당권을 노리던 수도권 중진들이 대거 낙선해 지도력 부재와 내홍을 겪을 것이다.

좌우 양극화 국면에서 우파 결집을 늘 주시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그것을 과장해 허구적 전선을 만들고는 그것을 민주당 지지와 변호에 이용하는 중도계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와 경제 공황,
자본주의 위기 시기
지금 읽으면 좋은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우석균 외 지음, 장호중 엮음
책갈피, 208쪽, 12000원



사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크리스 하먼 지음, 이수현 옮김,
책갈피, 168쪽, 9000원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폴 푹·헬 드레이퍼 지음,
차승일 엮음,
책갈피, 232쪽, 12,000원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56쪽, 4,000원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김인식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됐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다. 정의당은 비례대표로 5석을 확보했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비교적 온건한)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민중당은 29만 5612표(득표율 1.05퍼센트)를 얻었다. 아쉽게도 김종훈 의원이 33.7퍼센트로 2위에 그쳐 낙선했다.

두 정당은 중요한 노동계 정당이다. 두 정당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로부터 온전히 독립적이지 못하고 동요할 때도 많았지만, 당의 사회적 구성이나 재정·투표 기반은 명백히 노동계급적이다. 이데올로기나 정책만 갖고 정당의 성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두 정당 사이에 득표 격차는 커져 왔다. 2011년 통합진보당 분당 이후 치러진 몇 차례 선거들에서 정의당이 민중당을 앞서는 추세가 지속적 으로 확대돼 왔다. ‘될 만한 데 밀어 주자’는 유권자들의 투표 심리,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본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반도 정세 등이 선거에서 민중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정의당은 10퍼센트가량 득표했는데,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2퍼센트(6석)에 그쳤다. 이 때문에 많은 언론들과 정치 평론가들은 정의당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권이 180석을 얻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국회 투표 결정권)를 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의당이 공식 정치에서 실질적 무게를 가지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고 평가하는 것과 처참하거나 초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른 말이다. B학점을 목표로 삼은 시험에서 보통인 C학점을 받은 것을 두고 F학점 낙제를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정의당의 전국 선거 득표수는 완만하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2016년 총선에서는 171만 9891표(7.23퍼센트), 2017년 대선(심상정 후보)에서는 201만 7458표(6.17퍼센트), 2018년 지방선거에서 226만 7690표(8.97퍼센트)를 얻었다. 이번 총선에서는 270만 표가량 얻었다.

특히, 정의당은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과 울산에서 전국 평균 득표 이상을 했다. 수도권 지지 확대는 진보 정당의 오랜 꿈이다. 수도권에서 보루를 쌓지 않고서는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 지지율도 지난 총선에 비해 대부분 늘어났다.



중요한 노동계 정당 중 하나인 정의당이 270만 표를 얻고도 6석 확보에 그쳤다

다만, 정의당의 득표수와 의석수 사이에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정의당의 선거 성적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만큼 충분히 위력적으로 느껴지지 못하는 듯하다.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돌풍이 노동자들의 사기에 미친 영향과 비교된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여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지금의 곱절 이상이 됐을 것이다. 정의당은 자본가 계급 양당, 특히 민주당에게 의석을 도둑맞은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

이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정의당이 잘못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누구는 비례 위성 정당의 출현을 두고 주류 양당뿐 아니라 정의당에게도 제도 설계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물론 정의당이 민주당에 의존해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정의당에 불리한 국회 내 세력 관계를 이해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옳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둑맞은 집주인한테 ‘너 왜 도둑한테 당했어? 책임 물을 거야’ 하고 말하는 건 곤란하다. 다만, 집주인은 법률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방법 설비를 등한시한 결과로부터 올바른 교훈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의당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에 참여했어야 했다’는 주장들이 나온다. 정의당이 독자 출마를 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이 의석수를 늘리려 하는 것은 당연한 목표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거나 최우선의 목표가 되면, 비례 정당 문제에서는 무원칙하기 이를 데 없는 기회주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의 정당이다.

그 당의 의원과 출마자 상당수는 우리 사회 상층에 속한다. 선거자금 등 정치자금도 거기서 나온다. 민주당의 정책도 기업인들과 국가 관료의 이익을 옹호한다. 민주당 정부들 하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사회적 양극화)가 완화는커녕 심화돼 왔다.

이런 계급적 성격 때문에 민주당도 통합당 못지않게 진보 정당의 의석 확대를 극히 싫어한다. 이 점에서 두 정당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민주당은 진보의 사이좋은 친구가 아니었다! 두 정당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통합당이 노골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다면, 민주당은 뒤통수를 쳤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도, 좌파 또는 노동계급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선거법을 통합당과 민주당의 전신 정당들이 의기투합해 만들었다. 현행 선거법의 기원인 1958년 제정 선거법은 그 목적이 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30퍼센트를 득표했다. 그러자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조병옥, 무소속 장택상이 만나 다음 총선에서 진보당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악에 합의했다.

그 결과 만들어진 선거법은 억압적인 규제 조항들을 통해 기성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좌파 정당의 선거적 성장 같은 새로운 위협 요소를 배제하는 데 이용돼 왔다.

따라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의존해 선거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려 했던 것은 마른 흙 몇 삽으로 늪을 메우려는 것처럼 가망이 없거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였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독자적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컨대,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 후보 중 유일하게 지역구에서 당선해 4선 의원이 되다

당에 참여한 정당 중 기본소득당은 범 민주당 계열이 아닌데도 선별적 재난 지원금을 고수하는 정부 방침에 침묵했다.

이렇듯,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정부·여당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을 고무하기보다 입안 가득 물을 머금은 듯 침묵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게 된다.

정의당은 민주당 비례 위성 정당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막판에 독립성을 지켰다. 그리고 조국 사태 때 취한 입장을 스스로 비판하는 등 차별성을 드러냈다. 진작에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지난해 한·일 갈등과, 진영 논리가 격렬하게 전개되던 조국 임면 정국에서 정의당이 정부·여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첨예한 정치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노동계급의 정치 의식에 정의당의 존재가 좀 더 강하게 각인됐을 것이다.

물론 정의당이 더 좌파적이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 더 많이 득표하지 못했다고 필자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근본적 요인들, 가령 계급 간 힘의 관계, 민주당에 대한 대중의 모순된 의식,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왼쪽으로 급진화시킬 만큼 충분히 강력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 노동자 투쟁과 자신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김문성 기자의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를 보시오.)

그럼에도 정의당이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부·여당의 배신과 공격에 맞서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것이 노동계급과 자신의 본질적인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이라는 두 자본가 정당이 번갈아가며 정치 권력을 잡아 기업인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중적 노동자 투쟁의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궁극으로 정의당의 선거 도전에도 이로울 것이다.

선거 이후 정부·여당은 조만간 노동계급을 공격해 기업의 이윤과 권력을 지키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정의당이 해야 할 일은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삶과 조건을 지키는 데 힘을 실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장호중 의사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일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했다. 휴업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 등 정부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예방이 아니라 처벌로 거리 두기를 강제하는 조치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으로 처벌 명분이 약화되면 반발만 낳고 효과를 잃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성 있게 휴업 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지원과 각종 부채를 경감해 주는 등 합당한 피해 예방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구로 콜센터와 병원 등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기업주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방역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아예 문을 닫기보다는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거리두기를 하며 가동하는 편이 낫다고 여겼을 법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실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준다. 기업주들이 제대로 된 (즉, 돈이 드는) 대책 없이 규정 준수만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병원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병원 측에 규정을 준수하라고만 할 뿐 개인 보호구와 재정 등을 제때 지원하지 않고, 병원 측은 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할 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자들의 걱정과 노동강도만 커지고 있다.

생활 방역?

이외에도 마스크나 심지어 우산을 쓰고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해야 하는 '재택근무' 노동자, 거리를 두고 일하느라 동선이 길어진 노동자 등 대부분의 부담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져 왔다.

노동자들이 이런 불편함을 참는 것은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 때문이지만 정부가 일부 개인과 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벌인 속죄양 삼기의 영향도 있을 듯하다. 정부는 '감염원으로 찍히면 사회적으로 파들림당할 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줬다. 필요 이상으로 동선을 까발리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신천지 측의 접촉자 명단 제공이나 31번 확진자의 동선 진술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지도 않을 뿐더러 낙인 효과 등 피해를 낳는 정부의 권위주의적 조치를 지지해선 안 된다.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한 콜센터 필수 업무만. 충분한 거리두기와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운영해야 한다

예방을 위한 지원과 배려 대신 권위주의적 통제에 의존한 것은 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는커녕 계속 상황에 쫓겨 왔음을 보여 준다.

이런 방식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다. 심리적 억제 효과가 체계적인 방역을 영영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말과 실제 조치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느끼고 있다. 정부의 엄포에도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방역, 해고 금지와 소득 보전 등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요구들을 제시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근거 없는 권위주의적 통제와 집회 금지 등 정치적 억압에 순응하지 않을 것임도 보여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것을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감염 위험에 맞서 저항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건을 지키면서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전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바이러스의 불확실성과 세계적 유행을 고려하면 지금은 다음 파도를 기다리는 소강 상태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상황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감염력을 보여 주고 있는 바이러스에 많은 전문가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 최근에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중대한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와 친정부 언론의 자화자찬 속에 현 상태가 지속되거나 심지어 '생활방역'으로의 전환, 개학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도록 내버려 뒀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감염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공장과 사무실을 그대로 가동하도록 지원하는 등 보건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조치가 계속돼선 안 된다.

미국 등 열강들이 경제 활동 '정상화'에 조바심을 내고 있으므로, 조만간 해외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이 문을 활짝 여는 효과를 낼 것이다.

특히 정부 여당이 총선 승리감에 도취된 지금이 위험해 보인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윤 벌충 기회를 붙잡으려는 자본가들을 뒷받침하려고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위험한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

집회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를 거의 전적으로 민간기업들에 내맡기다 보니 또 다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지원'이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규제 완화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이나 인보사 사건에서 드러난 실험 결과 조작을 부추기는 효과를 낸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로 유명해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회장 서정진의 주식평가액은 4월 9일 현재 4조 1396억 원으로 석 달 전인 1월 20일에 비해 1조 4021억 원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소득을 잃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극도로 인색하다. 그런데 이처럼 무게 중심이 피해 완화에서 기회 포착으로 옮겨 가면 더욱 친기업적 대책으로 기울 수 있다. 이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경제 위기의 고통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자들은 온 힘을 다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들의 항의를 모아내 행동으로 조직하기 시작해야 한다. 좌파는 노동자들이 단결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미국의 '코로나 사회주의'?

코로나19에 대한 미국의 대처가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각 국가들의 대응 범주는 크게 신자유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된다. ... '재난 사회주의' 혹은 '코로나 사회주의'라고 부를 만큼 미국의 대처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조를 탈피한 양태가 나타난다."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트럼프가 경제 상황 악화를 막으려고 엄청난 현금을 쏟아붓고, 해고를 안 하는 기업에 대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심지어 몇몇 기업을 국유화 하더라도 이를 '사회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과장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그랬듯이 자본주의 국가도 심각한 위기에 빠진 체제를 구하기 위해 국유화에 나서기도 한다.

게다가 이번에도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는 기업 이윤과 시장에 있지 않았고 대중의 안전과 생명에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해고를 안 하는 기업에 대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도 어지간한 나라들에서도 하고 있는 조치로, 이것만으로는 대부분의 해고를 막지 못한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기업주들의 해고를 막지 않았다. 4주 만에 무려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미국의 실업자 통계가 이를 잘 보여 준다.

현재 이탈리아와 영국의 증례치

명률(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13퍼센트를 넘는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11퍼센트를 넘었고,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향하고 있는 미국도 4.4퍼센트를 넘었다.

한때 중국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보여 주는 듯했던 야전병원은 이제 선진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도 되는 듯 세계 주요 도시에 설치됐다. 수십 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와 긴축이 이런 나라들에도 중국 못지 않은 불균형을 만들어 낸 것이다.

트럼프를 비롯해 여러 나라 지배자들은 중국이나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예방'하려고 달려들었다가는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미칠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일부는 그 때문에 아예 현실을 외면했고, 일부는 인구의 일부를 희생시켜서라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했다. 보리스 존슨이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한 편의 희극 같은 일이었지만, 1만 2000여 명에 이르는 영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노동계급과 취약 계층에 집중됐다.

이런 자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매우 잘한 것처럼 부각됐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의 최대 공신은 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코로나·경제 위기 대책도 노동자들이 환영할 만한 것은 못 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죽음과 이윤을 거래하려 드는 자본주의 지배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급진적 학자 노먼 브라운은 저서에서 이렇게 썼다. “역사는 인류를 마침내 스스로를 절멸시킬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했다.

“역사의 이 순간에 삶의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승리가 결코 불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해야 마땅하다.”

브라운은 이 책을 1959년에 썼다. 그가 말한 “죽음의 승리”란 핵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선택들이 빠져서 리게 깨달은 바를 다시 깨닫고 있다. 질병 탓에 죽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죽음에 맞선 삶》이라는 이 책의 제목이 몇 주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죽음은 어떤 추상이 아니다. 죽음은 14세기에 유럽 인구 3분의 1을 죽게 한 흑사병을 다룬 임마르 베리만의 역사 <제7의 봉인>에 나오는 것 같은 어떤 신화적 인물도 아니다.

이 세계에 드러운 죽음은 계급적 죽음이다. 죽음은 밀라노·런던·뉴욕 등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 중심지 몇몇을 휩쓸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수치는 끔찍하다. 뉴욕에서 흑인과 라틴계는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두 배 높다.

시카고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72퍼센트가 흑인이다.

뉴올리언즈의 한 식료품점 주인이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일은 힘들지, 오래 일하지, 받는 것은 쥐고리고, 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몸이 나쁜 것밖에 못 먹고 … 이 동네 사람들은 삶이 기저질환”이었다.

노동빈곤층은 재택 근무도 못 하고 격리 공간도 없다. 이들은 외출 제한령으로 일자리를 대거 잃었고 가족들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영국은 부족하게나마 사회안전망이 남아 있는 나라다. 그러나 4월 11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식량 관련 싱크탱크인 푸드파운데이션의 발표를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지난 3주 동안 식료품이 부족해 끼니를 거른 가족이 있다고 답한 성인이 6퍼센트에 달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영국인 약 300만 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압박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다. 유럽과 미국의 대기업과 우파 정치인들은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라는 압박을 키우고 있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 제한령



미국에서는 흑인·라틴계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백인보다 높다

을 완화하면 심증팔구 재감염이 만연하고 피할 수도 있는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할 텐데 말이다.

우파 주간지 <스펙테이터>의 편집장 프레이저 빌슨은 이에 대해 흥미로운 궤변을 늘어놓았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죽음들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동 제한령의 효과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다. 한 장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계속 일하되

되도록 집에서 일하라는 것이었다. 그

를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너무 아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빌슨은 이동 제한령으로 목숨을 구하는 것과 이동 제한령이 초래하는 경제적 타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역겨운 주장도 되풀이한다.

빌슨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15만 명이 더 목숨을 잃는다는 미심쩍은 추정치를 들이민다.

자유 시장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조차 이런 주장을 거들며 보지 않는다. “경기 하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세한 연구들은 그 영향이 흔히 짐작하는 것과 달리 부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증거들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기에 올라가고 경기 하강기에는 떨어짐을 시사한다.”

‘죽음에 맞선 삶’이란 이윤에 맞선 삶인 것이다. 살아생전 자본주의가 죽음을 거래하는 체제임을 이토록 생생하게 목격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언제나 그랬다. 초기 자본주의는 노예 무역과 아동 노동에 의존하지 않았던가.

이제 이 체제는 이 세상에 남은 야생 생태계를 침범해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창궐할 조건을 만들고 그 대가를 노동계급이, 많은 경우 목숨으로 치르게 하고 있다.

이에 맞선 투쟁은 삶의 투쟁이자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700호

번역 김준호



우디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이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다.

제대로 된 범역을 하려면 실질적 지원이 제공돼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주민 차별적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 중 내국인의 배우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얼굴정보를 제출하고 있다. 이주 운동 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는 이주민을 모두 배제했다가 이주 단체들의 항의가 커지자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에 대한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이주민·난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무급휴직을 강요받아 생활에 곤란을 겪는 이주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경기도

▶ 7면으로 이어짐

레닌 탄생 150주년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자였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핵심 사상을 개괄하고 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우파의 비판에 맞서 레닌의 유산을 옹호한다.

레닌을 스탈린주의의 아버지로 취급하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자유주의 우파 만큼이나 자유지상주의의 좌파들도 그린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초기에 이 불세비키 지도자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묘사는 완전히 다르다.

프랑스의 신디컬리스트(사회변혁적 노동조합운동) 활동가 알프레드 로스메르도 그중 하나다. 로스메르는 레닌과 직접 만나 레닌의 사상을 접한 후 불세비키로 전향했고, 이후 평생 불세비즘을 고수했다. 로스메르는 1924년 이래로 스탈린주의를 비판했으며 러시아가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됐다고 생각했다.

다음은 로스메르가 저서 <레닌의 모스크바>에서 레닌을 묘사한 대목이다.

“레닌이 [혁명정부 청사가 있던] 크렘린궁으로 나를 불렀다. 레닌은 [코민테른 2차 대회에 참가하려 온] 각국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레닌은 면담을 준비했다.

“첫 만남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대화 첫 마디가 자비난 편만한 분위기였다. 이는 대화가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레닌의 소탈함도 놀라웠다. 레닌은 거의 초면인 나에게 ‘제가 바보같은 글을 쓴 모양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1920년 7월 15일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아심 차례 결정한 제2차 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달라고 ‘세계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그러나 러시아를 둘러싼 국경은 여전히 봉쇄돼 있었고, 모든 접경지는 만만찮은 장애물이었다.

“1920년 6월 모스크바의 분위기는 묘하게 매혹적이었다. 무장 혁명의 전율이 여전히 느껴졌다. 세계 각국에서 온 온갖 정치 경향의 대표들 중에는 서로 아는 사이도 있었지만 대개는 처음 만난 사이였다. 그들 사이에서 진정한 동지애가 저절로 피어났다. 토론은 열

띠었다. 논쟁할 거리가 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혁명과 새롭게 태어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확고한 애착이 모든 것에 우선했다.

“크렘린궁이라는 유리한 고지에서 레닌은 대회 준비 작업을 예의 주시했다. 혁명 이후 처음으로 레닌은 유럽·아메리카·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레닌은 대표자들에게 서둘러 질문을 했다. 대표자들은 도착하자마자 크렘린궁에 있는 레닌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크렘린궁에 도착해 레닌의 집무실로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을 곧 만나게 될지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일행은 레닌의 저술에 관해 (최신 저작 몇 개를 제외하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파산적으로만 알았다. 과거에 레닌이 러시아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 내 여러 경향들과 갈등을 벌였던 열띤 투쟁들에 관해서는 비교적 모호하게 알 뿐이었다.

“레닌의 글을 보면 레닌이 새로운 부류의 혁명가임을 알 수 있었다. ‘교조주의’(특정한 근본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은 듯하다)와 극도의 현실주의의 놀라운 결합이 그 특징이었다.

“레닌은 전술, 부르주아지에 맞선 전투에서 ‘기동’(전행적인 레닌식 표현이다)을 매우 중시했다.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해도, 어느 순간 아주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과 다정하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말이다.”

이런 소박함과 환대는 각국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귀국한 다음에도 거기에 갔다는 얘기를 이런 인상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태다.

레닌은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말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매우 박식했고, 서구 노동운동들을 비범하게 이해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이런 태도 덕에 레닌은 현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잡고 그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고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레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레닌은 기회가 왔을 때 이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었고, “지도자”로서는 흔히 없게도 자신의 오류를 흔쾌히 인정



통념과는 달리 레닌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다. 침울성 있게 설득하고 필요할 땐 단호했다

할 수 있었다.

레닌이 필요할 때면 단호하고 인정사정 없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혁명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인 듯하면 레닌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도 가차 없이 장 때서운 평가를 내렸고, 가장 혹독한 알아 온 사람과 다정하고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다.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도 말이다.”

이런 소박함과 환대는 각국에서 온 대표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귀국한 다음에도 거기에 갔다는 얘기를 이런 인상에 대한 얘기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태다.

《국가와 혁명》

1919년 초 레닌의 책 <국가와 혁명> 몇 권이 프랑스에 도착했다. <국가와 혁명>은 예상치 못한 책이었고 기이한 운명을 맞이했다. 명실상부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이

론가들 사이에서 이단 취급을 받았다. 그 이론가들은 절규했다. “이건 마르크스주의가 아니다. 아나키즘과 블랑키주의의 잡탕이다!”

반면 ‘정설’ 마르크스주의의 주류 바깥에 있던 혁명가들, 신디컬리스트들, 아나키스트들에게 그런 자들이 불인 “블랑키주의”라는 딱지는 반가운 것이었다. 그들은 이전에 알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마르크스에 대한 다소 낮은 이해를 읽고 또 읽었다.

마르크스·엥겔스의 글과 그에 대한 레닌의 논평을 실은 <국가와 혁명>에는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본질 그 자체가 담겨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레닌 자신에게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레닌은 이렇게 썼다. “이 글들은 모두 반세기 안 된 것들인데도, 오늘날 왜곡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발군하다시피 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국가가 필요하다.” 모든 기회주의자들이 이 말을 되뇌인다. 이들은 그것이 마르크스의 가르침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멸하

는 국가. 구성 즉시 사멸하기 시작하고, 사멸할 수밖에 없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뒷받치는 것은 ‘잊어버린 다’.

“기생적 흑인 ‘국가권력 분해’, 국가 권력의 ‘제거’, ‘파괴’, ‘이제 무용지물이 된 국가권력’, 마르크스가 파리코뮌의 경험을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국가에 관해 쓴 표현들이다.

“프롤레타리아에게는 국가가 일시적으로만 필요하다. 국가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나키스트들과 의견을 같이 한다.”

따라서 레닌에게 사회주의 혁명은 먼 미래의 목표가 전혀 아니었고, 부르주아적 합법성의 굴레 안에서 단계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모호한 이상도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당면한 문제였다. 전쟁이 제기하고 노동계급이 해결할 문제였다. 특히 아나키즘·신디컬리즘 전통 출신 혁명가들은 레닌의 글들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언어와 자신들과 닮은 사회주의 개념을 보고 기뻐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20년 4월호

번역 오수민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김지윤

문제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

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에도 베트남 유학생 등을 강제 출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강경 대응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마치 이주민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원인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국내 거주자가 없는 경우 2주간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때 드는 체류 비용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 비용이 하루 10만 원이나 된다.

국내 거주자가 있는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숙사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시설 지원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주민이 이용하는 기숙사 대부분이 여러 명이 한 데 모여 지내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측에 격리 기간 중 임금 지급과 휴가 처리도 별도 규정이 없으면 노동자와 합의하라고 했다. 유급휴가는 권고에 그쳤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열었지만 계약이나 투자 같은 사

업상 목적, 국제회의 참가, 긴급 수술이나 장례식 참가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기업가들의 출입국은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2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감염병 위기 경보, 테러 경보 등의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해 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것도 이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모든 외국인은 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소에 체류 예정 속소소를 발급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외교관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지문 유급휴가는 권고에 그쳤다.

정부는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열었지만 계약이나 투자 같은 사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6면에서 이어짐

에게 지급 수당의 90퍼센트까지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만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퍼센트대 수준이다.

이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는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오히려 지급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주민들도 비용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충분한 복지를 이주민·난민에게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난민들도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면회를 중단했지만 근본적 조처는 못 된다. 보호소 직원들이 출퇴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보호소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영문명도 ‘이주민 구금소’이다. 전 세계에 외국인보호소는 세 곳(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 전남 여수)인데 적게는

150여 명, 많게는 260여 명이 구금돼 있다.(2018년 12월 기준)

이들 중 대부분은 체류 기간을 넘긴 미등록 이주민, 난민 신청자다. 심각한 위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몇 개월씩 장기 구금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4년 넘게 구금된 경우도 있었다.

난방시설이 열악하지만 겨울에도 모

포 1장만 추가 지급될 뿐이고, 슬리퍼

를 신고 생활해야 한다. 구금 기간 입어야 하는 보호복은 겨우 2주에 한 번 세탁해 교체해 준다.(2019년 대한변호사 협회)

의료 지원도 형편없다. 구금 인원이 가장 많은 화성보호소에서는 상주 의료 인력이 전문의 1명, 간호사 1명에 그친다. 통역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되

지 않아서 진료가 원활하지 않다. 지난해 10월에는 화성보호소에서 1년 동안 구금돼 있던 이주민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연히 물리적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 보호소에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1인실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런 조처는 구금 이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갉아먹을 것이다.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이현주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기존의 5배가 넘는 금액(50억 달러, 한화로는 6조 원)으로 방위비를 인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자국의 이익과 필요 때문에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뻔뻔하게도 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피해를 보는 양 하며 한국에 "비용 분담"을 요구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바깥에서 미국이 벌이는 군사 활동까지 금전적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친정부 언론들은 이 정도 인상안이면 문재인 정부는 할 만큼 했고, 오로지 트럼프만 문재인 것처럼 누앙스를 풍긴다. 애초 트럼프의 요구가 터무니없이 높다 보니 이런 식의 프레임 설정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퍼센트 인상률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인상률이 한자리 수를 벗어난 적은 이제껏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8차 협상에서 인상률은 2.5퍼센트(185억 원 인상, 그해 물가상승률 2.8퍼센트)였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차 협상에서도 5.8퍼센트(505억 원 인상, 그해 물가상승률 1.3퍼센트) 수준이었다.

이미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벌인 10차 협상 당시 인상률인 8.2퍼센트(787억 원 인상, 그해 물가상승률 0.4퍼센트)가 유례없이 높은 인상률이

었던 것이다. 그러더니 문재인 정부는 1년 만에 그보다도 더 높은 인상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실체를 보여 준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협조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초에는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7일 국방장관 정경두는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해, 호르무즈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국이 남중국해 등지에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자 벌이는 전략이다. 미국의 전략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지원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과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는 한국 지배계급에게만 득이 될 뿐이다. 반면 한반도에 사는 대중은 갈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로 내몰려 왔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에 1조 원 넘게 지원한다고? 총선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더 노골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응하려 할 수 있다. 13퍼센트보다도 더 높은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미군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에 돈을 써야 한다.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과 폭격기 동원해 무력 시위 중인 미국 코로나19 대유형 와중에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보름째 강제 무급휴직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이 결국 강행돼, 현재 보름 가까이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상태에 처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가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성과'를 보여 주고자 할 것이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방위비 인상 요구가 이런 사태를 낳았다. 주한미군은 그간 '군사상 필요'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도 보장하지 않고 열악한 조건을 강요해더니, 이제 한국 정부에 방위비 대폭 인상을 압박하려 노동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된 4월 1일, "오늘은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고 말한 것은 뻔뻔한 위선이다.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결정한 일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강제휴직을 시킬 것이라면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무급휴직 조치가 강행되고, 한국 정부가 이 노동자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재인 정부도 여기에 응하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용자에게 맞서 스스로 싸워서 휴직수당을 쟁취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해당 노동자들의 조직 수준이나 투쟁의 전통에 비춰 당장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더러 당장 생계 위기에 처한 이 노동자들 구제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지난 4월 1일 국방부는 무급휴직 사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사실 특별법 제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월급이 끊긴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은 못 된다. 노동자들에게 빚 내라고 하는 것을 '지원'책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민망한 일이다.

정부는 지난 4월 1일에 '타결 임박' 설을 언론에 흘리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부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는데, 이렇듯 선거 득표만을 노리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제스처만 취하다 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이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미국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일 텐데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편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점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약속을 현실화시키려 해도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과 투쟁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

미국이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는 일은 앞으로도 재현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럴 때 한미동맹을 중시해 온 한국 정부가 이 노동자들을 구하기 위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노력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난망한 일일 수 있다.

결국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조건을 방어하는 데서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공격에 맞서서 스스로 조직하고 싸울 준비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주한미군의 인질이 된 한국인 노동자들을 문재인 정부가 구할 의지가 있는가? 3월 30일 주한 미국대사관 앞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강요하는 미국규탄' 기자회견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4월 9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의 청와대 앞 기자회견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들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의 업무와 처우는 어떤가요?

우체국 위탁택배는 2002년 11월에 도입됐습니다. 집배원들이 배달하는 ‘등기 소포’[우편법 상 우체국 택배를 지칭하는 용어]가 매년 증가하니까 집배원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했어요.

[우체국 위탁택배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2000명에서 2020년에 약 4000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2018년 10월에]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정규 집배원 2000명 충원을 권고했는데, [우정사업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정규 집배원 대신 위탁택배원] 750명을 증원하기로 해서 [위탁택배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우체국 택배의 50퍼센트를 위탁택배원들이 배달해요.

우체국물류지원단에 따르면 저희는 현재 하루 평균 택배 190개를 배송합니다. 보통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서 하루 11~12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수수료가 삭감되면 지금의 중노동 구조에서 [줄어든 임금을 벌충하려고 배달 물량을 늘리게 돼] 장시간·중노동 구조로 악화됩니다

우정본부가 저희 월 수입이 494만 원이라고 발표했어요. 동료 노동자들이 [‘우정본부’를]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분노했어요. 월 평균 수수료가 400만 원 조금 넘어요. 여기서 차량 임대비, 부가세, 유류비 등 매월 고정비로 120만 원이 나가요. 여기에 [보통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식비 등을 계산하고 나면 실질 임금은 200만 원 수준이에요.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은 우정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년에 1번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받는 차별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 때문에 위수탁 계약으로 통칭되는 계약서는 말 그대로 노예 계약이에요. [우정본부의 통제를 받는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휘 감독과 통제,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2018년 계약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주의를 준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주위가 4회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에

요. 노동조합이 독소조항이라고 해서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계약서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가득해요.

관리자들이 물량 개수나 구역 조정 등으로 장난질도 쳐요. 올해 2월 노조가 있는 부산 해운대우체국의 관리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택배원들이 배달하던 아파트 단지를 집배원들에 넘기는 일방적 구역 조정을 통보했어요. 사측이 강행하자,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체국장이 손 들었던 사례가 있어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물품이 전혀 보급이 안 돼, 노조에서 2월 6일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날 저녁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마스크나 손 소독제가 충분치는 않지만 지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나 위험한 건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광주우편집중국이 [근무하는 우정실무원의 확진 판정으로] 폐쇄됐었어요. 근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휴업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2월 6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뒤 계약서 상 하루 보장 물량 수준에 맞춰 수수료가 휴업수당으로 지급됐어요. 그런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정본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처우개선은커녕 위탁택배원 임금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우정본부에겐 수수료 체계를 바꿀 천군만마예요. 우정본부는 수수료를 낮춰야 택배시장 경쟁에서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올해 무

슨 욕을 먹더라도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려 해요.

기존 [우체국 택배] 단가는 중량과 부피와 거리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데, 저희가 받는 수수료는 전국 단일 고정 체계로 10킬로그램마다 200원씩 추가돼요. 지금은 [한 달에] 같은 물량을 배송하면 수수료가 비슷해요.

[우정본부는] 이것을 민간 택배회사처럼 차등 수수료 체계로 바꾸려 해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수수료를 낮추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수수료를 높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저희는 위탁택배원 도입 취지에 따라 95퍼센트 가량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에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큰 초소형 택배 (1~2킬로그램 이하의 택배)의 경우, 현재 수수료가 1166원인데 우정본부의 개편안대로 하면 800원이 돼 임금이 월 60~80만 원 줄어요.

그리고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하면 10명이 같은 물량을 배송해도 10명의 수수료가 다 천차만별이 돼요. 200여 개의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도입해서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거죠. [차등 수수료제가 도입되면 서로 공통 분모가 줄고 서로 좋은 구역을 가지려 싸우게 돼요. 민간 택배회사들은 이것을 악용해서 대리점장들이 구역 조정의 전권을 행사하려 해요. 저희도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관리팀장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리점 소장의 역할을 하게 돼 민간 택배회사들을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고 봐요.]

임금 삭감 시도에 대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임명한 책임자가 있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수수료를 하루아침에 360원 이상 깎으려고 하는 것에 분

노가 상당합니다. 다행히 노동조합에 대한 결의로 수렴되고 있어요. 노조가 없으면 이런 구조적인 싸움은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 조직화를 강화하고 있어요. 비조합원들의 가입도 늘고 있어요. 올해 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나뉘어 있던 노조를 통합했는데 2150명 수준에서 벌써 3개월 사이에 2400명 수준으로 늘었어요. 수수료 삭감 시도가 통합의 계기가 됐어요. 지난해 말부터 우정본부가 수수료 개편 얘기를 계속 흘렸고 노동자들 사이에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노조 통합의 핵심 취지도 우정본부의 수수료 체계 개편에 맞서 노동자들이 더 크게 단결해서 싸우자는 거예요.

저희가 우정본부에 코로나19 사태로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능하니 6월 말인 재계약 만료를 3개월 더 연장해 달라고 제시했어요. 그런데 우정본부의 답변은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못 하는 건 노조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8일에 우체국 2300명, CJ대한통운 1500명, 총 합쳐서 3800명을 조직하는 상경 투쟁을 계획하고 있어요. 정의권이 확보되는 5월 말~6월 초에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한테는 우정본부의 수수료 삭감을 저지하는 투쟁이 있고,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에게는] 원정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시기 집중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고, 5월 18일에 CJ대한통운 택배 기사들과 같이 투쟁하는 거예요. 정규직 집배원의 연대도 중요해요. 연대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터뷰·정리 신정환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춰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구를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

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헌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렴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강동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동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도 89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397억 원)보다 2585억 원(40.4퍼센트)이나 증가했다.

반면, 지난달에 일자리를 구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5만 3000명 증가에 그쳐, 지난해 3월보다 52퍼센트나 줄었다. 감소 폭이 19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 취업자 2700만 명 가운데 자영업자,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200만 명은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 경제 위기로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는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도 인정하듯이 코로나 19 확산과 경제 위기 심화에 따른 피해는 올해 2사분기부터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4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성장률은 -3퍼센트,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도 -5.9퍼센트와 1.2퍼센트로 대폭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도 2.2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하향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80년(-1.6퍼센트)과 외환 위기 때인 1998년(-5.1퍼센트) 두 차례뿐이다. 세계 금융 위기 때인 2009년에도 한국 경제는 0.8퍼센트 성장해 마이너스로 추락하지는 않았다.

1998년과 2009년에 일자리 수십만 개가 사라졌던 것을 보면, 앞으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공산이 큰 것이다. 이미 항공업, 관광업, 숙박업, 제조업 등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처럼 고용 위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고용을 유지하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해고하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휴업수당의 최대 90퍼센트를



기업 지원은 160조 원, 일자리 보호 예산은 1조 6000억 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4월 21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유지 대책을 추가로 내용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기업 지원 예산은 160조 원이나 되지만, 일자리 보호 대책으로 증액된 예산은 고작 1조 6000억 원밖에 안 된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7조 6000억 원 정도만 지급하는 계획을 고집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1인당 100만 원씩 52조 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운동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말이다.

고용유지지원금

게다가 기업 지원은 대폭, 신속하게 하는 것과 달리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금은 구멍이 많고 효과가 제한적이다. 자영업자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1200만 명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4월 13일까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자 47만 명 중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2만~3만 명밖에 안 되고, 지원금도 총 2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말로는 '신속한 지원'을 얘기하지만,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 대상을 가려내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을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기업 살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실업 방지를 위해 노동자 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고용보험 미가입자들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긴급실업수당' 제도를 시행해 모든 실직자·휴직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기업 지원과 '해고 금지' 연계"도 강조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해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 정부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이와 비슷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만 대출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면제받는 일명 '일자리지킴대출'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물론 민주노총이 "기업 지원과 '해고 금지' 연계"를 요구하는 것은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노동자를 해고하는 기업들을 규제하라는 좋은 취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 요구는 고용 유지가 기업주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약점이 있다. 예컨대, 쌍용차처럼 대주주가 사업을 아예 포기하려고 하거나, 고용주가 자신이 내놓아야 하는 휴업수당 지급분도 부담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더 강력한 해고 규제가 필요하다. 또 파산하는 기업은 국유화를 해 국가가 일자리를 지키라고 요구해야 한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부와 기업주에 맞서, 모든 해고 중단을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이 강화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시/군/구까지)

소속 (☐ 직장 ☐ 노조 ☐ 대학교 ☐ 종교동학과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3만 원 ☐ 4만 원 ☐ 5만 원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 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년 3월 30일 개정

전화 02-2271-2395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이정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풀이 말아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 항공·관광·서비스업 등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인력감축, 해고, 휴업 사태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 지원에는 16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하지만, 노동자·서민을 지원하는 데는 이 돈의 단 1퍼센트만 내놓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 노·사·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일방 양보와 희생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의 “경직”된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해야 경쟁력을 키우고 취약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정부가 경사노위를 통해 추진해 온 일들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위기 극복 위한 노동자 양보 압박하는 문재인 정부 3월 6일 경사노위 노사정 합의

선언’에서 노동자 집회 자제와 임금 협약 연기 협조를 끌어냈다. 4월 6일에는 경사노위와 금융 노·사·정이 공동 선언문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도입 추진 등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단지 경사노위만이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초 경제주체 원탁 회의에 민주노총을 초대한 것, 비상경제회의의 참여를 요청했던 것,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민주노총 집행부를

만나 다층적 사회적 대화를 요청했던 것 등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포섭해 위기 극복을 위한 협조(양보)를 구하고 투쟁을 자제시키려는 것이다.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총은 4월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안전망 전면확대와 해고금지·총고용보장 투쟁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량해고 위기 현실화” 조건에서 “비상한 대응”을 하기 위

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진정 필요한 일은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고통전가, 양보 압박에 정면 도전하면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집행부가 제시하는 방향은 이와 사뭇 다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정부에게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촉구하면서도 노동자들도 보험료 인상과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에 협조할 수 있다고 거듭 밝힌 것을 보면 말이다. 최근 공공운수노조의 핵심 간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성과급을 양보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사용자들의 양보 압박에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자들 내부를 분열시켜 투쟁을 약화시킨다는 맹점이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대화 추진에 큰 열의를 갖고 나서는 것도 우려스럽다. 김명환 집행부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협의 제안을 꾸준히 해 왔다. (경사노위가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집행부도 산업별 노사정 또는 노정 대화를 촉구했다.

물론, 이는 기업 살리기에 편중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취지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 악화와 사용자들의 공세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와 조건을 지키려면 강력한 대중적 저항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을 강제해야 한다.

위기 때마다 부활한 국내의 사회적 협약이 노동자들의 조건을 지켜 주지 못했다는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 추진은 투쟁을 강화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노동자들의 투쟁 태세를 흐트러뜨리고 마비시킬 수 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추진에 공을 들이면 ‘국난 극복’에 협조하라는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기도 십상이다.

민주노총 내에서 올해 노동절 집회를 동시다발 퍼포먼스 등의 방식으로 축소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4월 16일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한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민주노총이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에 협조만 해서는 곤란하다. 큰 무리 없이 총선까지 치른 것을 봐도 적절한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실외 집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중 집회를 조직해 노동계급 대중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으므로 문재인 정부를 추동해 개혁을 얻어 낼 수 있다고 보는 듯도 하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한 (말이 아니라) 실천을 보면, 이런 기대는 무망하고 위험하다.

오히려 정부는 위기의 한국 자본주의를 구출하기 위해 경제 효율을 꾀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다. 이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 희생 강요를 뜻한다.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필요한 이유이다.

신간 소개 |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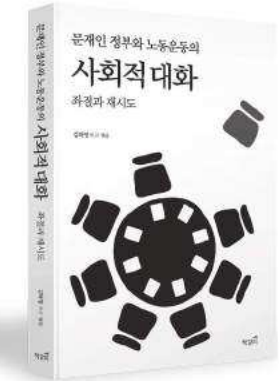
박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 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좌절되고 재시도를 거듭했는지를 다룬 신간이 나왔다. 책갈피 출판사가 발행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가 그것이다. 이 책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자 조직노동자운동팀장이 쓰고 엮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대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김하영 쓰고 엮음. 책갈피. 227쪽. 12,000원

퇴라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또, 적대적이었던 과거 노·사, 노·정 관계가 이제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었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대화 바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을 고립시키고 위축시키고 싶어 한다.”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운동이 달라져야 한다거나, 사회적 대화로 노동조

합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설득력을 더한다.

이 책은 저자가 노동운동에 깊숙이 관여해 좌파적·투쟁적 방향으로 이끌고자 애쓴 활동가라는 장점도 잘 살아 있다.

김하영은 노동운동 좌파들과 함께 2019년 1월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를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키는 활동을 했다. 당시 《12문 12답: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가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비롯해 여러 글을 쓰고 노동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문재인 ‘개혁’의 성격을 분석하고, 사회적 대화, 직무급제, 연대임금, 구조조정, 계급투쟁과 연대 등 주요 노동 쟁점과 운동 내 논의를 꾸준히 다뤄 왔다.

그런만큼, 이 책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의 위치에서 쟁점과 노동운동 측의 대응을 다룬다.

문재인 집권 초기부터 고개 든 사회적 대화 참여론과 민주노총 집행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참가,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로 경사노위 참여 반대가 확산된 것, 좌파의 경사노위 불참운동의 과정과 의미를 다룬다. 그 뒤로도 제기되는 사회적 대화 활용론의 위험성도 경고한다.

또, 이 책은 문재인 정부가 기회가 될 때마다 사회적 대화를 꺼내 들었음도 상기시켜 준다. 문재인은 경제적·정치적 위기 국면에서 아쉬울 때마다 그렇게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분으로 양보를 압박하려 했을 때(민관정협의회),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노동계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연출하려 했을 때(김상조의 민주노총 방문과 새로운 대화 약속), 총선 전에 대화 제스처로 불만 관리 능력을 보여 주고자 했을 때(스웨덴식 목요일대화 제안)가 그런 사례이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건 최신 사례다. 그러나 총선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부는 본격적

인 노동개약에 착수하려 들 것이다. 노·사·정 대화로 투쟁을 발목 잡고 양보를 압박하면서 말이다.

저자는 “양보와 협력”이 계급을 떠나 모두에게 이롭다는 정부 주장을 비판하면서 말한다. “[노사정 대화로] 누가 좋고 매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지금처럼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주문이 ‘상식’이 된다. ... 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기대야 한다.”

이 책은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독일 하르츠 개혁,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 등 세계적인 사회적 대화형 모델의 진실도 담고 있다. 이 글들은 해당 나라의 좌파 활동가들이 직접 경험한 생생한 내용이라 신뢰를 더한다. 흔히 이 모델들이 좋게 평가되지만, 오히려 이 협약들이 어떻게 노동자 처지를 악화시키고 투쟁을 마비시켰는지 다룬다.

노동계급의 조건을 방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꼭 읽어 보길 바란다.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김지태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운임보다 적게 지급했다.

이에 앞서 4월 10일 울산의 한 운송업체 노동자들은 5일간 파업을 해서 이 '추가 수수료'를 폐지했다. 이를 본 다른 업체들 몇 곳도 따라서 안전운임제 준수를 약속했다. 그러자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4월 13일 울산 전제로 파업을 확대했다.

노동자들은 단결된 힘을 보여 줬다. 며칠 전 이미 사측에게 안전운임제를 약속받은 노동자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택배 노동자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울산지부 전체가 함께 파업했다.

노동자들은 비조합원에게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실제 성과를 냈다. 이번에 합의한 업체 20여 곳 중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 없는 곳들이다. 한 파업 노동자는 말했다.

"비조합원들도 우리와 같은 화물 노



“임금 떼먹기 중단하라” 울산 석유화학단지 안에 집결해 있는 노동자들

동자입니다. 우리가 운송업체들의 편법과 횡포를 막으려면 더 크게 단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조합원들도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이번 투쟁에선 파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한 전술도 사용됐다. 파업 노동자들은 울산 석유화학단지로 들어가는 출입구 4곳과 인근에 있는 울산신항, 온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차 진입구를 막고 안전운임제 준수를 약속한 업

체 차량만 통과시켰다.

파업 첫날 조합원들은 파업 소식을 미처 몰랐던 노동자들이 오면 처음 한 번만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유인물을 나눠 주고 파업 중이니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많은 비조합원들이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보내며 호응했다.

파업 둘째 날부터는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업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울산신항에서는 봉쇄를 뚫으려고 경찰이 개입하기도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 공격을 막아 냈다.

이런 단호한 투쟁 때문에 운송업체들이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투쟁 확대

광양에 이어 울산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이 승리한 것은 인상적이다.

지금 전국의 많은 운송사들이 안전

운임제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4개 운송업체와 13개 컨테이너 선사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집행 정지 행정소송도 접수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위축이 있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4.3퍼센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된 3~4월에는 타격이 더 컸을 것이다. 사용자들은 이로 인한 이윤 손실을 만회하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광양과 울산 화물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도 투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싸울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지금 다른 지역 화물 노동자들도 투쟁하거나 투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4월 10일부터 제주 BCT차량(시멘트 제품 운송 차량) 노동자들이 무기한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차를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인” 열악한 임금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산지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도 파업을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 최대 물류 거점인 부산에서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 (특별재난강령)

2020년 3월 26일, 노동자연대

-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휴교로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라.
- ⑥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공공시설 거주자들에게 긴급 생필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라.
- ⑦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주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라.
- ⑧ 정부가 재난생계소득 100만 원을 즉각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라.
- ⑨ 노숙인들에게 안전한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라.
- ⑩ 특정 집단에 대한 속죄양 삼기를 중단하라.
- ⑪ 집회 금지 조치 등 정치적 억압 반대한다.
- ⑫ 상가와 주택 월세 납부 및 부채 상환을 유예하라.
- ⑬ 노동조합은 정부가 이런 요구를 채택하도록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